도, 청년 농업인 육성에 '올인'

안정적인 영농 정착 · 성장 위해 22개 사업 3402억원 투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성장을 위해 2025년까지 22개 사업에 3,402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농업에 쉽게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최재용 국장은 20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 농업인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지속할 수 있는 농업과 활력있는 농촌 조성에 기여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청년 농업인 지원을 △진입 △정착 △성장 등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진입 단계: 7개 사업, 35억원 투자

농업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농업 교육과 창농 지원이 강화된다.

전문인력양성으로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5,325명을 대상으로 5개 분야 105개 과정을 운영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156명을 대상으로 20개월간 교육을 진행한다.

축산 인력 양성으로는 축산연구소에서 30명을 대상으로 한우 사양 관리, 인공수정 등 전문 교육과 실습을 지원한다.

이어, 농업대학·농업계 고교의 최첨단 실습시설을 확충하고, 급식비 지원 등을 통해 예비 농업 인력을 양성한다.

▲정착 단계: 9개 사업, 3,214억원 투자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주거 지원이 강화된다.

영농 정착 지원금과 관련, 신규 청년 창업농을 710명에서 728명으로 확대 선발하고, 238억원을 지원한다.

경영 안정 지원과 관련, 정책자금 대출 이자(최대 250만원) 및 농지·축사 임차료(최대 500만원) 지원 등 총 6억원을 투입한다.

주거 안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농촌 보금자리 사업을 확대(3개 지구 → 4개 지구)해 124억원을 투입, 공공임대주택(30호)과 공동보육·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한다.

청년농 소통강화도 나선다. 45개의 생생동아리 지원(연 150만원)과 도 차원의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해 청년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성장 단계: 6개 사업, 153억원 투자

청년 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을 14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고, 79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57억원을 투입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특화작목 기반 신제품 개발을 위한 마케팅(2억원), 스마트팜 컨설팅(2.3억원) 등을 지원한다.

최 국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북에는 2023년 기준 청년농(40세 이하) 비중이 3.3%로 전국에서 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상태이며, 2018년 이후 점진적이나마 청년 농업인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그 중심에는 전북자치도의 청년농육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자치도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으로 8년 연속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올해도 청년들이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고 농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이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민생 안정 · 지역 발전 '한마음'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3차년도 2차 회의
10개 안건 의결… 전북 발전 위해 지속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이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정헌율) 민선8기 3차년도 2차 회의가 20일 '익산 고도 한눈애(愛) 세계유산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민생과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비롯해, 앞서 18일 대구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추진 사항이 공유됐다.

이날 협의회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전북자치도와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인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북의 발전은 특정 시·군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14개 시군이 상호 협력하고 넓은 시각에서 정책을 논의할 때 가능하다"며 "각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996년 8월 1일 설립돼 전북 시군의 공동현안 해결과 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지난해 7월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정헌율 익산시장은 격월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30억 사업 청탁은 명백한 허위사실"

박용근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도의원(장수군 선거구)은 지난 18일 열린 도의회 윤리자문위원회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권고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이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일부 지역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혀 사실무근인 30억 사업 청탁 의혹 프레임을 박 의원에게 씌워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역 여론을 호도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30억 청탁'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청사에너지 절감 시스템(FECO) 설비 검토는 박 의원을 통해 최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작년 9월 이미 도청 회계과와 제안처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FECO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누리고 있는 도내 종교시설 관계자가 실사를 나온 공무원들에게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전했으나, 공무원들은 도청 상부에 절감효과도 없을뿐더러 도리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더 낫다는 허위 보고를 하여 제안처가 이에 대해 사실 해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면담 요청을 해 와, 의원실에서 제안처와 도청과의 면담 자리가 마련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11월 중순, 전북도가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무료 설비가 가능하고, 매년 15억원이 소요되는 전기료의 30프로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해 청사관리팀에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국비 지원으로 무료 설비가 가능한 FECO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다가 갑자기 28억의 혈세가 들어가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 검토 방향을 바꿨고, 도 회계과장이 박 의원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 도입을 위해 예산 확보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어서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면담 초기에는 본청 건물만을 대상 5억원이었던 예상 비용이, 이후 도청 회계과에서 본청 및 부속 건물과 도의회로 확대 적용할 경우의 소요 예산을 제안처에 요청하여 총 23억원을 제안했으나, 추후 이것이 갑자기 30억으로 둔갑한 연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자료 제출 의혹에 대해서는 제안처와 도청 직원이 FECO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 시설의 전기료 절감효과에 대해 설명하던 중, 도청 직원이 제안처의 주장을 반박하며 거친 언어를 사용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양쪽 절감 효과를 비교해 자료제출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항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왜곡된 사실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도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진실을 밝힐 것이며, 잘못된 여론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만호 기자

김동구 도의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제도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에 열릴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에서는 △'골목상권'을 대규모·준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지원, △매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만호 기자

김명지 도의원, SRF 사용 제한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고형연료제품(이하 'SRF')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SRF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SRF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때 유망한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았으나,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명지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령 상 사용제한 고체연료에 SRF를 지정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령 상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에 전북 등 SRF 고사용 지역을 추가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위의 사항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21일 제416회 본회의 폐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가결될 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 관계부처로 전달된다. /이만호 기자

"인구감소 대응 위한 예산제도 도입해야"

문승우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올해 첫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인구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문 의장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현 '인구절벽'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19년 전인 2006년부터 지금까지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을 4차례에 걸쳐 발표하며 400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또한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을 고려한 현금성 지원에 급급해 출혈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구인지 예·결산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성 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가칭)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저출생·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재정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는 재정이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승우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 인구절벽 위기는 이미 지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당면과제"라며 "정부는 국가·지방재정 모두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일이 더 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올해 첫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군산시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시의회 상임위서 가결

한경봉 의원 발의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등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서 가결됐다.

이날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세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가결시켰다.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 필수 물품 지원 근거 마련, 긴급 상황 대비 공공시설 내 비치 규정 신설, 지원 규모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시장의 권한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 인증제도 운영 근거, 인증요건, 절차, 유효기간, 인증 취소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 운영 등 요건을 갖춘 인증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세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회원 식사에 필요한 부식 구입비 지원 규정 신설과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규정을 수정하고,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다.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경로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카드형 목욕권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 목욕업소와의 협약 체결 절차 마련,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위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카드형 목욕권을 신청한 어르신들은 지정된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욕업소는 기존 종이형 목욕권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 방식으로도 빠르게 정산이 가능해진다.

끝으로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 군산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5조 지원사업 중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 예산(경찰서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삭제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일자리 질 제고, 청년인구 유출에 적극 대응해야"

전용태 도의원, 정책토론회 열고 대응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진안)이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유출 원인과 대응 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국용 군산대 교수가 발제하고, 전용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어 염영선 의원, 권요안 의원, 김성수 의원, 오은미 의원, 윤정훈 의원, 임종명 의원 등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이정우 인구청년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그 해부터 전북 인구 185만 명 붕괴와 동시에 썰물 빠지듯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일자리의 양과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음에도 전북도정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청년인구의 급격한 유출이 초저출산·초고령화 심화와 더불어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주요 원인인 일자리 질을 제고하고 고교-대학-일자리 연계 방안과 관련된 후속 연구 추진, 제도 및 정책 마련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